

[종합]

與, 광주 亞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추진

열린우리당이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우리당은 최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 등을 골자로 한 별도의 법안을 마련, 정기국회 회기 내에 제출할 임박할 계획이라고 정책위 관계자가 밝혔다.

月內 당론발의...정기국회서 처리방침 내년 예산 2천538억 별도 편성키로

우리당은 가능한 한 빨리 특별법 시안을 만들어 이달 내에 문화관광부와 당정협의회를 거친 뒤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법의 준조문 국회 통과를 위해 대표 공동 발의자를 우리당 양형일 의원과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으로 정할 예정이다.

우리당은 또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아시아의 문화·에

같은 우리당의 경주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추진이 타 지역이나 야당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우리당이 제정을 추진중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안)'은 총 8장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이 안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 수립과 기반구축 및 조성사업, 문화산업진흥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문화유산의 보호인 경주를 역사문화도시로 지정해 개발하는 계획과 관련, 내년도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예산에 40억 원을 새로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우리당의 경주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추진이 타 지역이나 야당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해외거주 독립운동가 유족 입국 해외거주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이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 초청으로 14일 오후 인천공항에 입국했다. 미국거주 생존 독립운동가 박태일(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김성룡, 정영 선생 등과 독립운동가 유족들이 손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일본인 명의 땅, 여의도 면적 8배

재경부 올 6월 통계

광복 60년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땅이 서울 여의도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등기 토지대장에 일본인이나 일본 법인 명의로 등재돼 있는 땅은 4만8천750필지, 6천662만1천㎡였다.

인 명의로 돼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6월까지 3만6천365필지, 4천400만3천㎡에 대해 국유화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재경부는 조치가 끝나지 않은 6천662만1천㎡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확인 작업을 거쳐 주인이 실제 일본인이나 일본 법인인 경우 곧바로 국유재산으로 귀속할 방침이다.

1인당 稅 부담 작년 316만원 '사상 최대치'

지난해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이 316만원으로 또다시 사상최대치를 경신했다. 14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부 소속 김경률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연도별 조세 및 국민부담률' 자료에 따르면 작년의 경상 국내총생산(778조4천억원) 대비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316만원으로 전년의 308만원보다 2.5% 증가했다.

광주·전남 관광자원개발 부진

광산구 왕동저수지·화순 온천사업 등 행정절차 끝나지 않아 예산잔액 이월

문화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중점 관광자원개발 사업의 진척도가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광산구 왕동저수지관광개

발과 화순군 화순온천 사업은 개발 관련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아 올 예산이 모두 이월된 것을 비롯, 지난해 문관광부·지자체가 예산에 반영한 사업 가운데 45개 사업이 예산 집행 실적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노용래(열린우리당) 의원은 14일 문화부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예산에 반영된 214개의 문화부·지자체 관광 자원 개발 사업 가운데 전주 한옥마을 테마관광도 조성사업 등 45개 사업은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집행률이 30% 미만인 사업도 경남 청학동 전통관광마을 등 89개나 됐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가 15건으

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13건), 전북(11건), 전남(10건)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관광자원개발 사업 중 집행되지 않은 예산 1천281억원을 다음해로 이월했다. 광주의 '왕동 저수지 관광개발'은 지난 2003년 이월액 9억원과 2004년 2억 2천여 2억3천만원을 합쳐 모두 11억3천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으나 개발 관련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아 예산 잔액이 이월됐다. 이 저수지 개발사업은 빠르면 올 12월께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물이 닳아서 정수 없구나

서해 남북군사합의선 13일부터 정상 가동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을 막으려고 남북이 설치 운영키로 한 서해 '군사합의선'이 13일부터 정상 가동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시 도라산전방대 인근에 마련된 남북 통신연락소에 개설된 '합의선'으로 개성

의 북한군 경의선 공사담담 부대내 북측 통신연락소를 호출, 북측이 응답했다.

북측은 이날부터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 두 차례 정기적으로 통신을 주고받을 계획이다. 오전 9시에는 유선전화와 팩시밀리로 통해 서해 NLL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과 관련된 정보를, 오후 4시에는 통신연락소간 통신상태를 점검하는 전화 감도 시험 통신이 이뤄진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도청'지시 관련자 소환키로

검찰, 국정원 전·현직 간부대상

안기부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3일 도청 물 유출 부분에 대한 수사를 매듭짓고 주말부터 도청 지사와 관련된 국·과장급 국정원(옛 안기부) 전·현직 관련자들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경삼 정부 시절 저질러진 안기부 특수도청조직 '미람'의 도청과 관련,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판단, 지시 계

통에 있었던 중간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도청 실태를 전반적으로 재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도청 자료 유출 부분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됐고 중간 단계의 수사에 접어들었다"며 "연휴인 데다 전직 간부들은 소환 시간에 소극적이어서 시간이 걸릴 듯 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중간급 간부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다음주부터 안기부의 광범위한 도청 실태와 도청자료 유출, 회수 과정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 for Sanhang bank with various interest rate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public auctions (공시최고) with property details and contact informa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the auction of court-ordered properties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various properties (매각 물건) with details on location and pric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 public auction (5. 매각방안) with detailed terms and conditions.

2005. 8. 15.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갑석